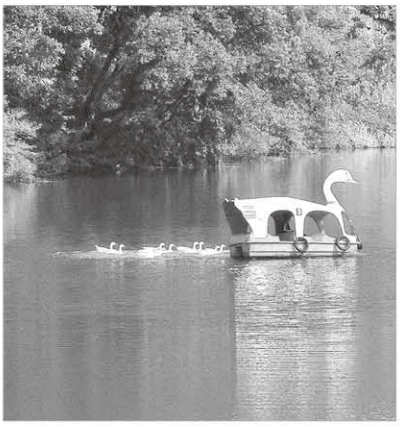
DUCK's NEWS

1

화제

## 엄마로 착각(?) '오리배' 졸졸 따라다니는 아기 오리들



호수 위에 떠있는 오리배를 보고 엄마라고 착각했는지 졸졸 따라다니는 아기 오리들의 귀여운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에는 호수 위에서 헤엄치고 있던 아기 오리들이 오리배를 발견하고는 가까이 다가가더니 이내 졸졸 따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아마도 엄마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아기 오리들은 오리배 곁을 한참동안 머물렀다고 한다.

▶ 애니멀플래닛 [2019. 10. 8]

2

## 철새 이동시기 도래…AI 방역 만전을

본격적인 겨울철새 이동 시기가 다가오면서 AI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10월 1일 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간 AI 특별방역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10월 2일부로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 가금사육 농가들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재 ASF 발생으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AI까지 발생할 경우 축산업계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 9월 27~29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도래한 철새는 총 3만6,308수로, 시화호(1만6,243수)와 한강 하구(1만923수)에서 대부분이 발견됐다. 이 중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오리 · 기러기류는 2만2,178수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겨울철새의 남하 이동시 처음 도래하게 되는 경기, 충청권 일대 주요 도래지 및 하천 10개소 조사결과, 현재까지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오리 · 기러기류의 본격적인 도래는 시작되지 않았고 전년 동기(3만7,436수) 보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됐다"면서 "하지만 일부 겨울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번 달 중 · 하순 이후부터는 오리 · 기러기류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가금관련 전문가는 "고병원성 AI는 지난 2003년 국내에 처음 발생한 뒤 이후 2~3년 주기로 다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발생패턴을 고려할 때 올해 창궐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가금농가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 그물망 훼손 여부 점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라며 "이미 국내에 ASF가 발병 한 만큼 각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가금농가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방역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올겨울 AI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축산신문 [2019. 10. 4]

## 가축전염병 확실한 방역체계 구축해야

3

### 농식품부, 전국적 방역 역량 집중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ASF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도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은 가축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로 농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인 방역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가축 전염병 발생률이 높은 시기 집중 방역 체계에 들어가 질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이외에도 특별방역이 아닌 수시 방역을 실시해 국내 방역망을 초기에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ASF 백신이 없고 AI는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은 백신접종이 가능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항체 형성율이 완벽하지 않아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ASF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가금농가에 대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사전에 과거 구제역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하는 등 농가의 백신 접종 여부도 집중 단속해 백신 항체율을 높이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SF 발생으로 양돈농가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가축 전염병이 더해진다면 국내 축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방역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위한 방역청 신설 건의가 나온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축산농가의 깊어만 가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할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농축유통신문 [2019. 10. 4]

## 4 전남 오리산학협력단, 요리법 개발 경진대회

다양한 레시피 개발로 오리고기 대중화 기여

다양한 오리고기 요리법 개발을 위한 대회가 개최됐다.

농촌진흥청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주관, 전남 오리산학협력단이 주최한 제2회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요리법 개발 경진대회'가 최근 곡성군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전남 오리산학협력단(단장 전남대 이지웅 교수)은 지난해부터 매년 오리고기를 활용한 요리법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리고기가 오리탕, 오리백숙, 오리훈제 등 단조로운 조리법에서 벗어나, 일반 소비자들이 오리고기를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리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곡성군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15개팀(4인 구성)이 참가, 오리 복주머니 만두를 곁들인 로제 리조또, 오리야채볶음 비빔우동, 오리카츠를 곁들인 일본식 덮밥 등 15개 오리고기 요리법을 선보였다. 참가팀들의 열띤 경연 결과 오리 육수와 고기를 활용하여 오리고기 풍미를 살린 오리볼 파스타를 소개한 오리볼파스타팀(정지상, 손정은, 손수민, 윤준서), 마소스와 마블덕쌈팀(안지훈, 김민정, 최예빈, 최한솔), 마지막으로 애호박을 보트 모양으로 구어 그 속에 오리 찹스테이크를 담아 낸 애호박 보트에 담긴 찹스테이크와 단호박 퓌레팀(김선우, 김소정, 조예준, 박유채)이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했다.

전남 오리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에 참가한 팀의 요리법을 소비자들에게 소개 하고 홍보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며 "최종 우승한 팀의 오리고기를 활용한 요리법을 2019년 국제농업박람회때 일반 소비자들에게 현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축산신문 [2019. 10. 8]

## 5 남원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전북 남원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구제의 일원으로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증가를 위해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연중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보험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의 16종으로, 보험가입대상 품목은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시 관계자는"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 전라일보 [2019. 10. 11]

6

# 전남도, 2년 연속 AI 청정 온힘
# 선제적 고강도 차단방역 추진한다

전남도가 고병원성 AI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달부터 2020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선제적 고강도 차단방역대책을 추진한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전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등에 27개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특별 방역 조치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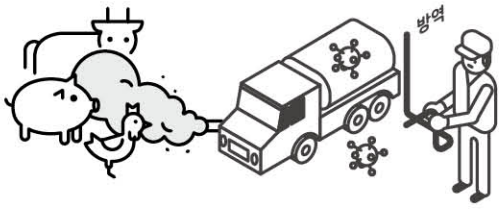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차단과 동일한 22개 시군 거점 소독시설 운영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에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조성 ▲종오리농장의 도 전담공무원 지정과 동물위생시험소 35명이 매주 농장 방문 점검 및 전화 예찰 등이다.

또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 이동통제 · 소독 ▲가금농장 입식 승인제 운영 ▲가금육계 및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간 휴지기 운영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 제한 휴지기제 실시(반복발생 · 밀집지역 등 72호 133만수)로 AI 발생 억제 ▲철새 도래지 10개소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한 선제적 야생조류 분변 검사 추진 등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오리 도축장 출하농장의 30%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종오리 농장의 경우 2주마다 AI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산란 중인 종오리 농장의 경우 산란 기록을 매일 시군에 제출토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금류 농가는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하고 축사 내 · 외벽 그물망 정비, 축사주변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과 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및 소독액 주기적 교체,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며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무등일보 [2019. 10. 16]



## 7 오리 '휴지기제'로 피해본 관련산업 지원 길 트이나

경대수 국회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리 휴지기제 등으로 인한 관련업계의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른 농가피해는 보상을 해주는 반면, 도축장, 가공장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업계의 타격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최근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관련업계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육제한 명령 등의 예방조치로 인해 축산종사자들이 여러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따른 것.
이에 정부는 사육제한 명령 등의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해당농가의 소유자 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을 뿐 그 밖의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에서 일하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일부 시 · 도의 경우 오리 휴지기제 등의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업체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대수 국회의원은 "축산 관련종사자들의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줌으로써 경영안정과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축산경제신문 [2019. 10. 18]

## 8 AI 발생 시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

올 가을 첫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0일 충남 천안시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취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단순히 질병확산에 대한 것 이외에도 농가가 받는 피해가 되풀이 되는 건 아닌지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AI 발생 시 반입금지 조치로 인해 지역 간 경계를 넘지 못하게 되면서 병아리 입식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피해를 받는 농가가 속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는 경상북도에서 이동제한을 두고 타 지역의 병아리 입식을 거부하면서 지역 내 농가에 대해서만 자체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타 지역 농가는 피해보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 보상을 받은 농가에서도 보상금액이 크지 않아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보상혜택이 고루 이뤄지지도 않았고 만족도도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리농가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에 있는 새끼오리가 전남도로 이동 입식하려 했으나 전남도에서 거부하면서 전량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상도 없어 고스란히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처럼 보상에 이르기까지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맡기고 방역 권한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관여하기 힘들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질병 확산을 막고 농가피해를 막는 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정부에서는 질병 발생 시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농가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추후 방역 정책을 마련, 강력 시행해야 할 것이다.

▶ 농축유통신문 [2019. 10. 18]

## 충북도, 오리농가 휴지기제 참여 주춤

9

충북에서 올겨울 오리 휴지기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시행한 2017년보다 20곳 정도가 줄었다. 오리 농가들이 소득 감소와 새끼오리 입식 후순위 등을 이유로 꺼리면서다.
충북도에 따르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오리 휴지기제에 참여하는 도내 농가는 모두 66곳이다. 전체 육용오리 사육 농가 119곳 가운데 55.5%가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음성 33곳, 진천 23곳, 청주 8곳, 영동 2곳이다. 이들 농가는 68만여마리의 오리 사육을 중단한다.
지난해 대상 농가 128곳 중 69곳(54%)이 참여한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2017년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했다. 당시 135곳 중 86곳의 농가가 참여해 64%를 기록했다. 매년 보상금이 오르고 있지만 오리 휴지기제 참여 농가는 되레 감소한 것이다. 올해는 1마리당 873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2018년 712원보다 22.6%(161원)이 올랐다. 2017년 510원과 비교하면 363원이 증가했다. 이는 보상금 지급이 오리를 사육하는 것보다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가가 오리를 키워 납품하는 수익금의 70~80% 수준으로 알려졌다. 새끼오리 입식이 미참여 농가에 밀리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대부분 농가는 오리 계열화사업자에 속해 있어 매년 3월께 이들로부터 새끼오리를 공급받는다. 참여 농가도 오리 휴지기제가 끝난 이때 새끼오리를 입식해야 한다. 하지만 계열화사업자는 일반 농가에 먼저 새끼오리를 공급해 참여 농가의 휴지 기간은 1~2개월이 더 늘어나는 실정이다.
오리를 농가에서 사서 육가공해 판매하는 계열화사업자가 대규모 사육 중단에 난색을 보이는 것도 요인이다. 사육 중단 농가가 증가하면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이유로 오리 휴지기제가 AI 예방에 효과가 있는데도 참여 농가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충북은 2015년 이후 해마다 AI가 발생해 수백만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 했다. 방역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손실이 컸다. 하지만 오리 휴지기제를 도입하자 AI는 잠잠해졌다. 2017년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는 3월 농가 1곳에서만 발생했다.
AI 발생에 따른 예산 투입도 대폭 감소, 2016년 겨울 ~ 2017년 봄 사이 발생한 AI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은 30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휴지기제 시행 이후 19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보상금 확대, 휴지 기간의 일부 조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충청매일 [2019. 10. 20]

## 10 농식품부 'AI 방역실시요령' 어떻게 개정됐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이 10월 10일 개정 고시됐다. 가금농가들의 올바른 숙지를 통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방역실시요령의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은 AI 발생 예방과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방역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사항 등을 행정규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먼저 대규모 가금농가 방역관리책임자에게 구체적 방역업무가 부여됐다. 여기서 말하는 '방역관리책임자'란 법에 따라 10만수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 선임돼 가축방역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역 전문가 또는 업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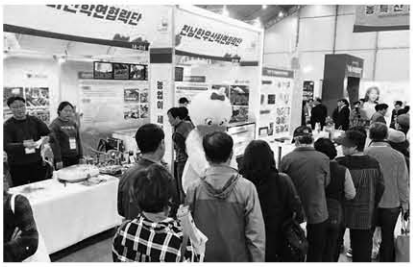
방역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농장과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해 AI 방역관리를 위한 소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AI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업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이행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가 보다 더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판매소 등 방역강화관리대상(닭과 오리 판매소, 가든형식당, 가축거래상인(계류장 포함) 및 가금 공급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장·군수는 방역강화관리대상에 대한 등록 및 예찰 등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AI 발생 시 방역지역 내 방역조치 중 일부가 조정되며, 시·군내에 1개이상의 공동처리장을 지정·운영하여 AI 발생 지역의 분뇨반출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 축산신문 [2019. 10. 16]

## 11 전남오리산학연협력단, 국제농업박람회장서 오리 홍보관 운영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광역화사업 활성화와 우수성과 확산을 위해 2019 국제농업박람회장에서 전남 산학연 4개 협력단이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산학연협력단은 대학과 행정기관, 산업체, 농업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전략작목을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쌀, 한우, 토마토, 오리 4개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리산학연협력단은 그동안 오리 사육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연중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오리 요리법 15종을 개발하여 이번 농업박람회장에서는 오리고기 가공식품 시식과 체험행사 등 오리고기를 활용한 반려견 간식을 선보이고 판매하고 있다.

한편 산학협력단에서는 농업 · 농촌에 대한 이해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미래 농업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고자 광주, 전남 소재 농과계 대학생 200여명을 초청해 박람회 관람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김희열 기술보급과장은 "국제농업박람회 기간 동안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작목의 우수 성과물을 알리기 위해 전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농업박람회장을 방문하여 농업을 이해하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경험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농수축산신문 [2019. 10. 24]

## 한국오리협회 성명서

12

#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개선 등 AI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 촉구

AI(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부터 11번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오리생산자들이 분노를 터트렸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10월 24일 '정부는 지금까지 AI를 11번 겪으면서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의 각성을 요구했다.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3월 17일까지 11차례의 AI를 겪으면서 정부가 매번 AI 예방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렇다 할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가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은 현재 AI 검사시료 운송에 있어 교차오염 등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오리농가의 경우 출하 전 전체 축사에 대한 AI 검사를 하고 있으며 도축장에 출하하는 물량 30%를 매일 정밀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농가의 폐사체 시료와 도축장 AI 검사시료를 농가와 계열업체 직원들이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어 교차오염 등의 문제가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협회는 제1종 가축전염병인 AI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발생에 대해 책임져야만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이 올겨울 3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협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제한으로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당하면서 오리고기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7%가 계열화돼 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관련 종오리장 · 부화장 · 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협회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열악한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을 개편해나가면서 지자체와 농식품부로 이원화 돼있는 방역권한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역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개선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 △일방적인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역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역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 농수축산신문 [2019. 10. 25]